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3년 5월 (제719호)

- ▶ 전월 대비 7.3% 증가(1,183,560건)
- ▶ 국세청, 국방부, 대전, 세종, 경기, 부산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6월 민원예보로 '국가유공자 보훈' 선정
-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소리

No. 719

월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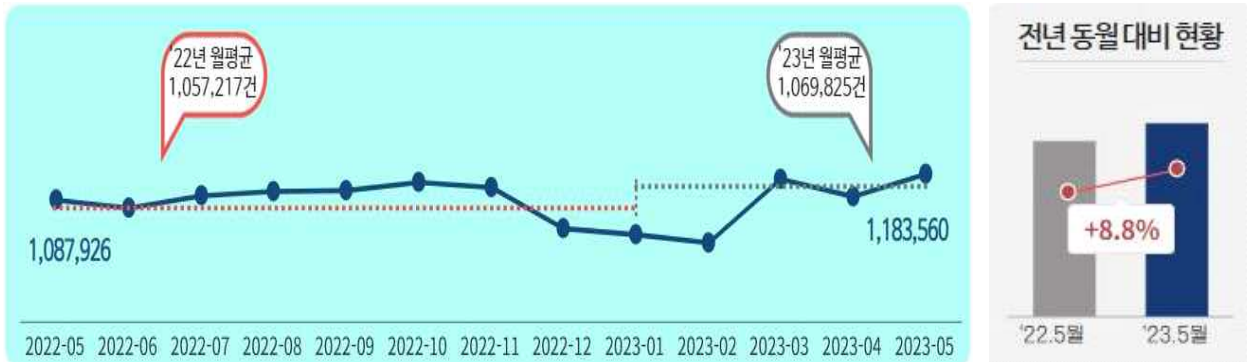
2023년 5월

01	민원 동향(5월)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02	기관별 동향(5월)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03	민원예보(6월) : 국가유공자 보훈	10
04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5월)	13

01 | 민원 동향(5월)

민원 추이

- 2023년 5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83,560건**
- 전월(1,102,734건) 대비 7.3% 증가, 전년 동월(1,087,926건) 대비 8.8%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5.1. 10시)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1.6%) 및 30대(28.3%), 성별로는 남성(69.5%)이 다수를 차지
-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0.5%), 30대 남성(19.3%), 50대 남성(14.5%)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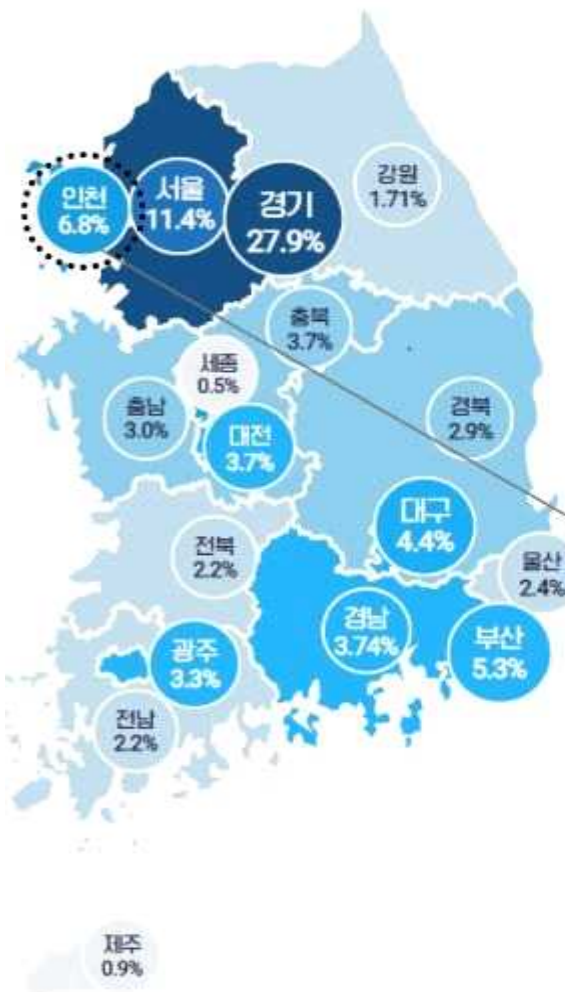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32,922건 대상

01 | 민원 동향(5월)

지역별 현황

- 경기 28.4%(77,709건), 서울 11.1%(30,143건), 인천 8.1%(22,247건), 부산 5.1%(13,963건), 대구 4.6%(12,572건) 등의 순
- 검암 △△아파트 시공불량에 대한 사전점검 재요청 등 **인천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47.1%↑)
- 인천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서 발생한 민원이 가장 많음(19,916건)

5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인천광역시 주요 민원키워드

불법주차
주차타워 부동산
폐기물입주민 당하동
지자체 사전점검
주차장 서구청 조합원
폐가구 인천 검암역
업무대행사

인천광역시 민원발생 현황



※ 신청지역이 확인된 1,005,443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01 | 민원 동향(5월)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56.3%)가 가장 많고, 도로(7.1%), 행정안전(6.0%), 환경(4.3%), 주택건축(3.6%), 산업통상(3%), 경찰·검찰·법원(1.9%)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경찰·검찰· 법원	보건	
56.3%	7.1%	6.0%	4.3%	3.6%	3.0%	1.9%	1.8%	
문화	수자원	교육	농림·축산	방송통신	복지	노동	도시	
1.4%	1.3%	1.2%	0.8%	0.8%	0.7%	0.7%	0.7%	
국방	재정	과학기술	세무	체육	관광	해양수산	외무통일	우정
0.6%	0.6%	0.6%	0.5%	0.5%	0.4%	0.3%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183,560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가순

점자 보도블록 위 무분별하게 주차된 따릉이 자전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여 및 반납 시 앱에 표출되는 안내 문구에 점자 보도블록을 주의하여 주차하라는 내용 추가 요청 등 **복지** 분야 증가



복지
101.6% ↑



주택·건축
56.4% ↑



산업·통상
52.2% ↑



과학기술
33.0% ↑



세무
32.3% ↑

감소순



경찰·검찰·법원
10.1% ↓



국방
6.9% ↓



우정
6.1% ↓



체육
2.9% ↓



행정·안전
1.8% ↓

01 | 민원 동향(5월)

주요 민원키워드

- 5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고양시 주상복합 공사중지요청, 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시공 불량, 대구 가스공급관리소 설치 반대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일반〉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1 불법주정차 등
		2 고양시 주상복합 공사중지요청	2 제2경인선 국토부 노선
		3 성남 터널분수 시공 불량	3 방향지시등 미점등
		4 대구서구 가스 관리소 반대	4 통합대책 요구(덕은)
		5 불법 광고물	5 어린이 보호구역
		6 용인시 타운하우스 승인	6 구리갈매역 광역교통대책
		7 영흥공원 폐기물 분담	7 인천서구 GTX역
		8 영통 소각장 폐쇄	8 경의중앙선 향동역
		9 대구 서구 전신주 지중화	9 제2경인선 부천 경유
		10 의료법 위반 간호장교	10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 불법주정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처분 등 교통법규 위반신고 등은 ‘불법주정차 등’ 키워드에 포함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일반 ② 고양시 주상복합 건설현장 안전기준 준수 요구 ③ 성남 창곡천 터널분수 설계불량 시정 요구 ④ 대구 가스공급관리소 서구 설치 반대 ⑥ 타운하우스 사용승인 검사 철저 요구 ⑨ △△ 초등학교 주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요청 ⑩ 근무지 이탈 간호장교 징계요구

도로교통 ②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추진 요청 ⑧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현황 확인 요청 ⑨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지 않아 교통이 열악한 부천남부 지역에 제2경인선 경유 요청

02 기관별 동향¹⁾(5월)

중앙행정기관

- 5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58,645건으로 전월 대비 **5.5% 증가**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국세청, 국방부 등, 감소한 기관은 국민권익위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경찰청	122,649	134,648	9.8%
국토부	30,955	39,015	26.0%
국방부	7,907	13,407	69.6%
고용부	8,578	11,494	34.0%
대검찰청	6,163	7,192	16.7%
국민권익위	19,760	6,737	-65.9%
식약처	5,408	5,193	-4.0%
국세청	2,246	4,584	104.1%
복지부	2,672	3,255	21.8%
행안부	2,947	3,001	1.8%
법무부	1,908	2,856	49.7%
과기정통부	2,561	2,734	6.8%
해수부	2,178	2,585	18.7%
환경부	2,251	2,211	-1.8%
공정위	2,146	1,762	-17.9%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국세청	2,246	4,584	104.1%
국방부	7,907	13,407	69.6%
법무부	1,908	2,856	49.7%
법제처	135	190	40.7%
금융위	404	549	35.9%
감사원	725	983	35.6%
노동부	8,578	11,494	34.0%
국토부	30,955	39,015	26.0%
농식품부	1,304	1,591	22.0%
복지부	2,672	3,255	21.8%
공수처	498	606	21.7%
해수부	2,178	2,585	18.7%
방통위	173	205	18.5%
대검찰청	6,163	7,192	16.7%
해양경찰청	126	144	14.3%

※ 5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감 사례]

국방부	취업 시 군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회사 제출용으로 군경력증명서 신청 증가(3,068건)
국세청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5.1~5.31.)동안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허위 제출 신고, 세무서 공무원에 대한 칭찬 등 관련 민원 증가(1,118건)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고·단속 요청(712건), 수용자 가혹행위·과밀수용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민원(434건)
국민권익위	△△은행 금융정보 공개 요구(2,457건), 새벽 굴착기 진동 소음에 대한 민원(2,560건) 등 동일 반복 민원 감소

02 기관별 동향(5월)

지방자치단체(광역)

- 5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83,652건으로 전월 대비 **-2.0% 감소**
-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대전, 세종, 경기 등 15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서울, 전북 2개 기관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서울	66,999	58,407	-12.8%	경북	277	637	130.0%
대전	5,507	5,681	3.2%	충남	429	454	5.8%
세종	3,556	3,816	7.3%	전남	389	390	0.3%
경기	3,013	3,219	6.8%	제주	315	382	21.3%
인천	2,278	2,412	5.9%	강원	344	375	9.0%
대구	1,468	2,216	51.0%	충북	360	364	1.1%
부산	1,085	1,936	78.4%	경남	320	339	5.9%
광주	1,482	1,769	19.4%	전북	309	298	-3.6%
울산	772	957	24.0%				

※ 5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경상북도

국도 대티골-영양방면 도로측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되어 위험하므로 도로시설물 보수요청(284건)

부산

○○○기념문화관의 부산 지명 설명이 올바른 것인지, 부산 지명 유래에 관해서 부산시 부산시사편찬위원회가 정리할 것을 요청(651건)

[분야별 현황]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교통**, 건설현장 도로 통제에 대한 불편사항 등 **도로** 분야가 많이 발생



① 교통(56.1%)



② 도로(7.8%)



③ 행정안전(6.6%)



④ 환경(4.3%)



⑤ 주택건축(2.9%)

1) '23.6.1.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02 | 기관별 동향(5월)

지방자치단체(기초)

- 5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778,967건으로 전월 대비 **8.1% 증가**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용인시,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남 함양군, 전남 함평군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34,807	38,538	10.7%
경기 고양시	16,978	22,498	32.5%
충북 청주시	16,810	16,889	0.5%
경기 용인시	10,643	16,862	58.4%
경기 성남시	15,684	16,586	5.8%
경기 화성시	13,051	15,295	17.2%
서울 강서구	12,742	14,159	11.1%
서울 서초구	12,456	13,302	6.8%
경남 창원시	11,726	13,244	13.0%
충남 천안시	11,393	12,228	7.3%
서울 관악구	12,439	12,165	-2.2%
경기 안산시	10,812	11,832	9.4%
대전 서구	10,529	11,597	10.1%
경기 평택시	10,451	10,770	3.1%
서울 영등포구	11,033	10,730	-2.8%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경남 함양군	149	328	120.1%
전남 함평군	175	335	91.4%
대구 서구	1,911	3,580	87.3%
전북 남원시	702	1,257	79.1%
전남 곡성군	97	161	66.0%
강원 양구군	107	170	58.9%
경기 용인시	10,643	16,862	58.4%
충남 청양군	88	132	50.0%
전남 보성군	135	202	49.6%
전북 무주군	80	119	48.8%
충북 증평군	272	392	44.1%
충북 단양군	123	176	43.1%
부산 강서구	2,373	3,318	39.8%
경북 성주군	141	197	39.7%
경북 울진군	187	258	38.0%

※ 5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경남 함양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이 전월대비260% 증가('23년 4월 56건 → '23년 5월 202건)
전남 함평군	전투비행장 유치 반대 현수막, 지역축제 홍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신고(190건)
경기 용인시	타운하우스 사전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시공불량 및 하자 관련 민원 발생(3,854건)

02 | 기관별 동향(5월)

교육청

- 5월 교육청 민원은 총 15,617건으로 전월 대비 **78.7% 증가**
- 부산, 세종 교육청 등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11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충남, 경남 등 6개 기관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경기	4,083	6,744	65.2%	강원	182	232	27.5%
부산	365	3,162	766.3%	대전	171	196	14.6%
서울	1,227	1,441	17.4%	울산	161	192	19.3%
세종	159	754	374.2%	충북	188	184	-2.1%
대구	199	498	150.3%	전남	163	173	6.1%
경북	228	486	113.2%	충남	191	157	-17.8%
인천	497	458	-7.9%	광주	151	141	-6.6%
경남	369	333	-9.8%	제주	61	56	-8.2%
전북	154	253	64.3%	※ 5월 민원발생량 순			

[주요 민원 사례]

부산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중 「2022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일 이전 퇴사한 근로자는 2023년 설 명절 휴가비 인상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강사들의 명절 소급 차별 지급에 관한 민원(2,131건) 등

세종교육청 교원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답변을 받았던 교사가 감사실의 2차 가해를 호소하며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교사 보호 및 감사 절차 적절성 검토 요구(598건) 등

02 기관별 동향(5월)

공공기관등

- 5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40,125건으로 전월 대비 21.3%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민원이 전월대비 대폭 증가, 감소한 기관은 법원행정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5,269	13,491	156.0%
금융감독원	5,029	3,387	-32.7%
한국가스공사	45	3,337	7,315.6%
한국전력공사	1,982	1,982	0.0%
한국소비자원	1,426	1,702	19.4%
법원행정처	4,475	1,338	-70.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222	1,207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52	1,042	-1.0%
대한법률구조공단	837	929	11.0%
한국자산관리공사	176	918	421.6%
한국산업인력공단	1,804	887	-50.8%
게임물관리위원회	1,280	847	-33.8%
국가철도공단	719	774	7.7%
한국철도공사	687	716	4.2%
한국도로공사	677	678	0.2%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기관명	'23.4월	'23.5월	증감률
한국가스공사	45	3,337	7,31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	106	783.3%
한국자산관리공사	176	918	421.6%
한국거래소	29	100	244.8%
한국토지주택공사	5,269	13,491	156.0%
한국에너지공단	59	110	86.4%
인천시설공단	146	219	50.0%
한국콘텐츠진흥원	93	126	35.5%
화성도시공사	91	122	34.1%
도로교통공단	80	106	32.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108	141	30.6%
한국소비자원	1,426	1,702	19.4%
근로복지공단	257	306	19.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78	565	18.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26	260	15.0%

※ 5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주요 민원 증가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규명 및 안전 진단 요구(2,954건)

한국가스공사

대구 달서구에 설치하려던 가스공급관리소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서구 정압 관리소를 증축·확장하기로 하자 반대 민원 급증(2,74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방대 부지와 덕은지구가 연결되는 부분이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통행이 단절됨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734건)

03 | 민원예보(6월) : 국가유공자 보훈

민원 추이

-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은 총 210,110건(‘20.5월~’23.4월)
- 분석기간 3년 동안 6월 누적 민원 발생 건수는 59,897건으로 전체 민원 발생 건수의 28.5%를 차지

〈 최근 3년간(‘20.5월~’23.4월) 매월 누적민원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남성(76.1%)이 여성(23.9%)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5.0%), 40대(27.8%), 50대(19.2%), 60대(7.8%) 등의 순
 - 신청지역은 인천 서구(41.7%), 경기 하남(16.1%), 강원도 춘천(2.8%)등의 순
-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78,799건(전체의 85%), 연령 정보 확인 가능 93,492건(전체의 45%) 대상
- * 신청지별 정보 확인 가능 208,884건(전체의 99%)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 기관유형별로는 국토교통부(26.5%), 국가보훈부(13.8%), 인사혁신처(6.7%)등의 순
- * 국토교통부 민원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지원 시 가점 문의 등이 대다수

개선 요청사항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보훈제도 관련 민원 분석
-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없는 자원방안 민원예보 발령 및 관계기관에 개선 필요성 강조

⇒ ①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7급 포함 ② 지자체마다 상이한 보훈수당 지급기준의 일원화를 통한 차별없는 보훈수당지급

민원 사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7급 포함]

- ▶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7급 판정자 및 그 유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구 분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보훈보상대상자(부상군경)
보상금	◦ 상이정도 등에 따른 일정액	◦ 국가유공자의 70%수준
부양가족수당	◦ 상이등급 1급1항 ~ 7급	◦ 상이등급 1급1항 ~ 6급(7급 제외)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원칙은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 7급의 경우 부양가족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상수준에 차이가 있게 됨

- ▶ (개선)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상이등급7급 판정자 포함

- 보훈대상자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예산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7급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비슷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5월 전라북도 김제시)
- 부양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보훈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선으로 반영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무산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상이등급이 낮아 보상금에서 이미 최저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가족수당까지 차별 받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네요.('22년 9월 강원도 춘천시)
- 보훈보상7급은 보훈급여가 40만원조차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똑같이 다쳐도 보훈보상이라고 분류되어 국가유공자와 차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족수당까지 차별하다니요.. 부디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7급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22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

(국가보훈부 답변) 재정 여건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사안으로, '2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

민원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 ▶ (현재) 지자체별 상이한 보훈수당 지급 기준(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여부, 연령제한 존재 여부)
 -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자 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대상 및 기준을 결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차이 발생
 - ▶ (개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연령제한 폐지) 일원화를 통한 전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 과천시 22년6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추가 하였습니다. 수원시도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22년 6월 경기도 수원시)
 -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시, 목포시, 신안군, 여수시에서만 조례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켜주세요.(‘23년 2월 전라남도 무안군)
 - 저희 보훈보상대상자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23년 1월 경기도 파주시)
 - 현재 성남시는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훈단체 미팅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은 언제 폐지될까요?(‘23년 3월 경기도 성남시)
 - 6.25참전 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거의 90세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가 높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령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22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 국가유공자들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길지 못하여 만6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여 보훈명예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22년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 답변)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지원 대상자 범위,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음

□ 조사 개요

- (배경)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에 반영 필요
- (기간) 2023. 5. 2. ~ 5. 15.(14일간)
- (참여) 총 5,334명 설문참여 (일반국민 2,456명, 국민패널 2,878명)

□ 설문 결과

<음주운전 추가 방지대책 필요성>

- 응답자의 대다수인 97.7%가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0.5%로 나타남
-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 순으로 나타남

<가장 필요한 음주운전 관련 정책>

- 응답자들은 △제재 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신상공개, △특수번호판 부착 등과 같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정책을 선호

<기타 국민의견>

-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신청 제한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 음주운전 초범도 벌금·형량 대폭상향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시 피해자 배상(예상수익, 양육비 등) 포함 법안 마련

□ 향후계획

- 관계부처에 설문결과 송부하여 정책마련 및 관련법 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
- 제도개선 권고 및 적극행정 요청 등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대책 추가 마련 노력

음주운전, 추가대책 필요한가?
가장 필요한 정책은...

알림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5월)	최희영 사무관	044-200-7287
02. 기관별 동향(5월)		
03. 민원예보(6월)		
04.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이철민 사무관	044-200-7274
시스템 이용 문의	HelpDesk	070-4108-3625